

벤처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원정책 개선방향

벤처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벤처 지원정책이 존재해 왔다. 이제는 보다 벤처기업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벤처코리아2005' 첫째 날 진행된 '벤처 CEO 포럼'의 발표내용을 통해 벤처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벤처기업은 우리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원동력으로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해 왔다. 일반기업에 비해 R&D 투자비율이 높은 벤처기업은 IT, BT, NT 등 신기술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레인콤, 코아로직, 엠택비전 등 스타벤처의 출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스타벤처의 등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을 완화시키고 국가경제의 중심역할 담당하는 성과를 거두게 만들었다.

또한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면도 적지 않다. 벤처캐피탈, 코스닥시장, 제3시장, 엔젤 등 새로운 금융부문을 등장시키고 선진금융시스템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다.

벤처 지원 정책의 현주소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 등 기업의 외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으로 경쟁력 제고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호·육성 위주가 될 경우 기업의 자생력을 배양시키기에 미흡하고, 한계기업의 시장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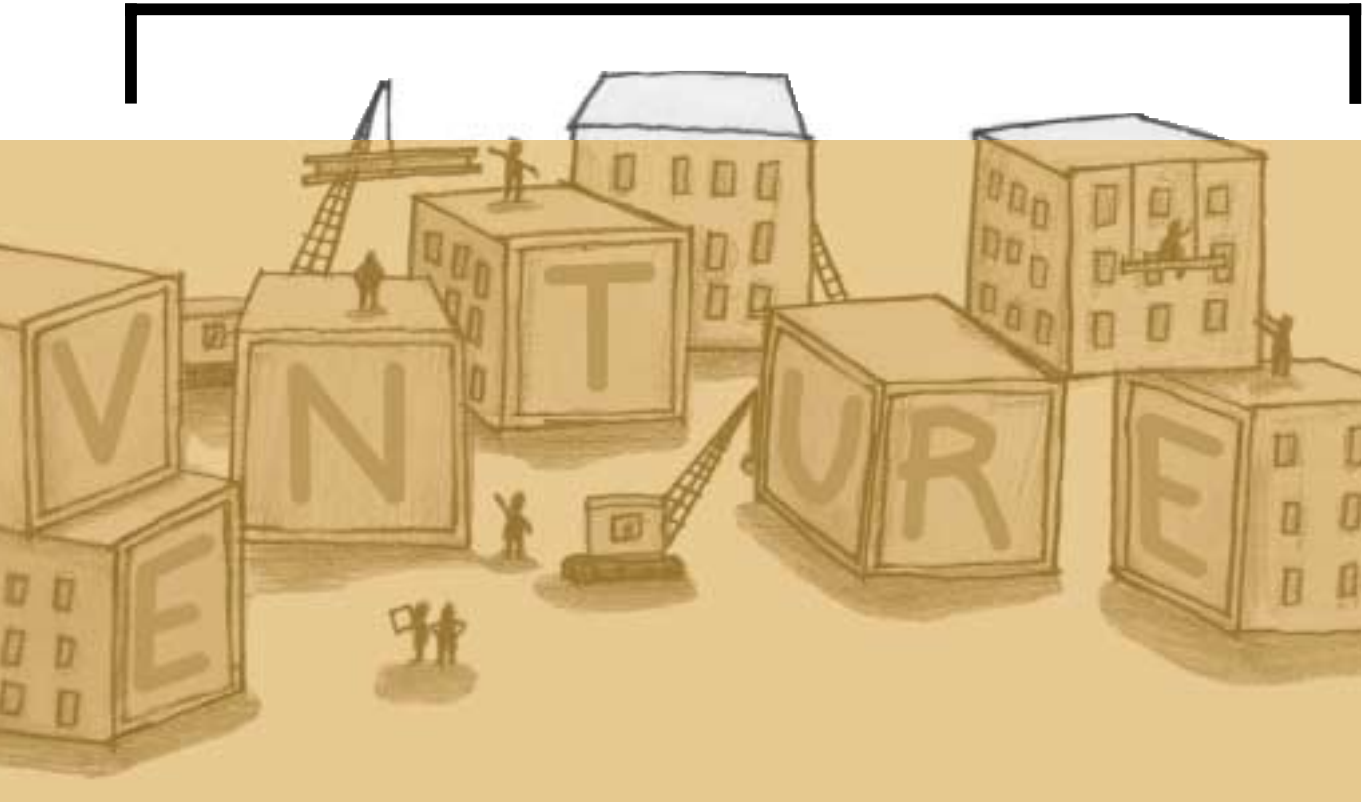
고부가 대체산업으로의 전환 육성 또한 미흡하다.

산업별로 선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도 지적할 만하다. 산업별로 환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방식을 택함으로써 산업별, 단계별 지원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창업, 창업세계, 인력, 금융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성장단계별, 관련 산업별로 맞춤형 정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미흡한 초기단계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산업별 지원이 필요한 만큼 부처별로 다양한 벤처 지원정책을 갖춰 정책 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산자부, 중기청 외에 정통부, 과기부, 문화부 등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부처간 정책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통해 상호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산업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필요

앞으로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지식기반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 적합한 경쟁력 확보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지원을 탈피하고, 경제변화에 대한 적응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여 역동성과 多産多死, 고위험-고수익이라는 벤처기업의 본질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창업·성장·구조조정이라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인프라와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선도할 만한 스타벤처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유도해야 한다.

이에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정책목표를 차별화하는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품·소재산업 -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와 일반 부품·소재는 상당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고부가가치의 핵심 부품·소재는 아직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델파이나 일본의 교세라 같은 세계적인 부품·소재 분야 선도업체도 부족하다. 따라서 부품·소재업체와 최종제품업체 간 공동연구개발 등 긴밀한 협력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과 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 소프트웨어산업은 중소·벤처의 창업율(4.6%)이 타 부문에 비해 높으며 설립된 지 3년 이상, 7년 이하인 기업이 48.8%를 차지한다. 때문에 창업 확대 및 성숙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방안과 더불어 기존 기업들의 성숙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수출실적이 저조한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과 이미지 제고가 가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바이오산업 - 국내 바이오기술 시장은 약 1조 2천억원 규모로, 그중 생물 의약 부문이 약 70%를 차지한다. 바이오산업은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는 21세기 전략산업으로서 IT, NT 산업과 컨버전스가 가능해 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해외 우수기업 및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독자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벤처 지원 정책 발전 방향

현재의 벤처지원정책은 자금, 기술개발, 인력 등 기능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지 않다.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정책 비중이 커서 창업확장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성장기 및 성숙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에 부합하는 동시에, 벤처기업의 질적 내실화 및 벤처활성화 달성을 가능케 할 산업별 지원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단순히 자금, 기술개발, 인력 등의 기능별 관점이 아닌 산업별,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벤처 지원정책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인 아닌 벤처기업의 수요에 부합한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해 내도록 벤처업계의 중지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